

전라감영길, '걷기 좋은 길' 조성

전주시, 특성화사업 일환 내년까지 46억원 투입 인도 설치 등 보행환경 조성

전주시가 보행로가 없어 불편했던 전라감영 앞길을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걷기 좋은 길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완산교부터 전라감영까지 전라감영로 500m 구간의 기존 왕복 3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줄이는 대신,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3억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외관을 정비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특화거리

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차도를 줄이는 대신 도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해 시내버스가 승객들을 태울 수 있도록 배리어를 설치하고 주변상가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조업차량이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정차공간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풍남문에서 전라감영을 지나 풍패지관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중심의 역사 문화의 거대한 전라감영 테마거리로 새로운 전통·역사관광 축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계층별 군

형 있는 의견반영을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 거주민, 인근주민, 활동가 등 5개 그룹의 총 25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활동가,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매월 1~3차례 지속적으 워크숍(6회)과 설명회(5회)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현장지원센터, 행정은 전라감영로에서 구현해야 할 우선 가치를 △청년 △주민주도 △전통 △관광의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 전진주

를 지중화하고 보행로를 설치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협정위원회를 설립,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와 주민들은 청년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해 5년~10년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급격한 전세리파게이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양도식 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사업 추진 대부분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였고, 향후 시공간계,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계획"이라며 "최소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전주 구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30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는 '전주시-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청년포럼'이 열렸다.

세계 지방정부, 청년문제 해법 찾아... 전주시, 아태지부 포럼

전주시가 세계 1000여 지방정부들의 연합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아시아태평양지부와 함께 청년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면서 글로벌 청년정책 선도도시로 주목을 받게 됐다.

시는 30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데이비드 패리쉬 영국 창조경제 전략가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청년정책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서울시와 부산시 등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 지자체 관계자, 청년, 일반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청년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아태지부가 주관하는 청년포럼이 전주에서 열리게 된 것은 시가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월드회의에서 제안해 거두들인 쾌거로, UCLG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도시에서 국제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시는 국제 청년포럼을 유치

사회적 경제 통제 본 일자리 창출 주제로 세계 석학 등 발제 진행

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청년무로 건강검진 사업 실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청년소통공간 비빌 운영 △청년 창업·창직 지원공간인 '청년상상놀이터' 운영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심리적 안정도 돕는 '청년심포 프로젝트' 운영 등 청년정책들을 펼쳐온 노력들을 인정받게 됐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통해 본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로시니 바슈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청년 문제 수석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영국의 창조경제전략가인 데이비드 패리쉬, 태국의 사회혁신학교 창립자인 폰찬 크라이왓닛, 샘 브러튼 뉴질랜드 웰린시장, 안수정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국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청년실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샘 브러튼 뉴질랜드 웰린 시장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웰린시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례들을 소개하며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파악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장점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비드 패리쉬 영국 창조경제 전문가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기업가 정신을 통한 청년 고용창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 입안자, 경제 개발 기관들이 공상이나 사무실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는 오래된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일자리가 2~4개씩 소기업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며 "이는 경미하게 여겨지지만 수천 개의 일자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소기업들에 의해 창출되며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의 문

화관광자원과 우수정책들을 국제기구 관계자와 주요석학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청년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관련 논의를 통해 글로벌 정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국제기구를 활용해 전 세계 석학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전주시의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적인 도시들과 함께 선진정책 발굴에도 힘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주는 이제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 가는 도시가 됐다"며 "청년문제는 전주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 문제와 소외, 건강, 주거 등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청년희망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국가가 지원

법제처, 내달 14일부터 시행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불법촬영(몰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비용은 영상 촬영자나 유전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높은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임에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재해보상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도 다음달 21

일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28일부터는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 승차자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근거도 규정했다. 아울러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정차·주차하려는 경우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규정도 마련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했을 경우, 원본과 함께 수정본도 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제처는 이같은 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02개의 법령이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스

광주 고교 현직 교사, 고1 여학생과 성관계 파문

'성적조작' 의혹까지 일어

여학생 부모 측 "성적취취 대상 삼았다" 분노

해당 교사 "강제성 없는 애정관계였다" 해명

광주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결혼가정의 1학년 여학생과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교사는 여학생과 관계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적을 고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여학생 집 인근 원룸에서 함께 만나 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 모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기간제교사인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36)씨가 다른 반 여학생인 B(16)와 과몰입 관계 맺어 온 것을 시인함에 따라 지난 27일 계약해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양과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지난 주말 광주에 사는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고 한 거절이 들끓으면서 밝혀졌다.

B양은 어머니의 추궁에 지난 25일 A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가 유명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서 동숙했다고 털어놨다.

/뉴스

'경찰 무전 감청 교통사고 선점'

전북경찰청, 렉카 불법 영업 조폭 검거 아날로그 무전방식 범죄 악용 대책 시급

경찰의 아날로그 무전방식이 범죄에 악용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무전기를 판매한 B(71)씨 등 2명도 전과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 자동차공업사와 렉카 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주파수가 확장된 무전기 이른바 '경찰 무전 감청 가능 무전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을 우선 선점, 돈을 벌기위해 이 무전기를 구입했으며 도내 각 경찰서 주파수망에 맞춰 112교통사고 신고를 도청했다.

이처럼 경찰의 무전기를 불법 감청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의 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디지털(TRS)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 도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타 지역은 예산상 등의 문제로 여전히 아날로그 무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무전망이 쉽게 뚫려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 무전을 감청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와 휴대폰, 블랙박스 등을 압수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경찰 무전 감청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다"며 "디지털 무전체계 도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

남부시장 일원서 이동상당실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지난 29일 풍남문광장 및 남부시장 일대를 돌며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로워진 복지, 2018 이동상당실'을 운영했다.

이 날 이동상당실은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에 대한 사전신청 홍보 등 새로워진 복지사업에 대한 거리 홍보 캠페인으로 실시, 시장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함께 관련 팸플릿과 유인물 등을 배포했다.

아울러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조속히 신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며 새로워진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성과 '특독'

전주시가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토지를 찾아주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모르고 있던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의 소유 토지 등 총 1만2,675건, 1만8461필지(1,857만9,000㎡), 약 2,538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과 화재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국 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

/송효철 기자

덕진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주시 덕진구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덕진구는 연초부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혁신도시 주변 일대 상가들의 여여간관 등이 난립하여 특별 단속을 했다.

이번 정비기간에는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직행버스터미널 전주역 등 전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구역을 집중구간으로 선정해 수시단속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